

제 목	한지붕 두 구청, 생활권 - 행정구역 불일치! 25년 만에 주민숙원 해결하다				
제도 활용 ^① (일자)	기타 적극적 자세	분 야 ^②	기 타		
자치단체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서명	총무과	전화번호	051-519-4114

① 현황 및 문제점

○ 금사대우아파트 현황

(2019.5.31. 기준)

계	행정구역	
	금정구(금사회동동)	해운대구(반여4동)
6개동 455세대, 상가 27호	2개동(101동, 106동,)130세대, 상가 27호	4개동(102동~105동) 325세대

- 금사대우아파트는 25년간 두 개의 구로 행정구역이 나뉘어져 있어, 쓰레기 배출, 복지혜택 등 혼선 초래 및 행정구역 분리로 수십 년간 주민불편 발생

② 조치사항

- 행정구역 조정에 관한 주민 설문조사 실시 : 2019. 5.7.~2019.5.13.
▷ 금정구에서 해운대구로의 행정구역 경계 조정 찬반 조사(찬성 78.8%)
- 금정구-해운대구 행정구역 조정 실무회의 개최 : 2019.6.12.
▷ 대우금사아파트 행정구역 경계조정 추진 동의, 세수결손 보전금 지급 협의
- 금정구 의회 의견 청취 : 2019.7.26.
▷ 「자치구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원안 채택
- 자치구간 행정구역 경계변경 건의(→ 부산시) : 2019.7.26.
- 행정구역 경계변경 조정안 제출(부산시→행정안전부) : 2019.11.6.
- 부산시 특별조정교부금 교부결정(10억원) : 2020. 1. 20.
- 국무회의 의결 : 2020. 5. 4.
- 대통령령 공포 : 2020. 5.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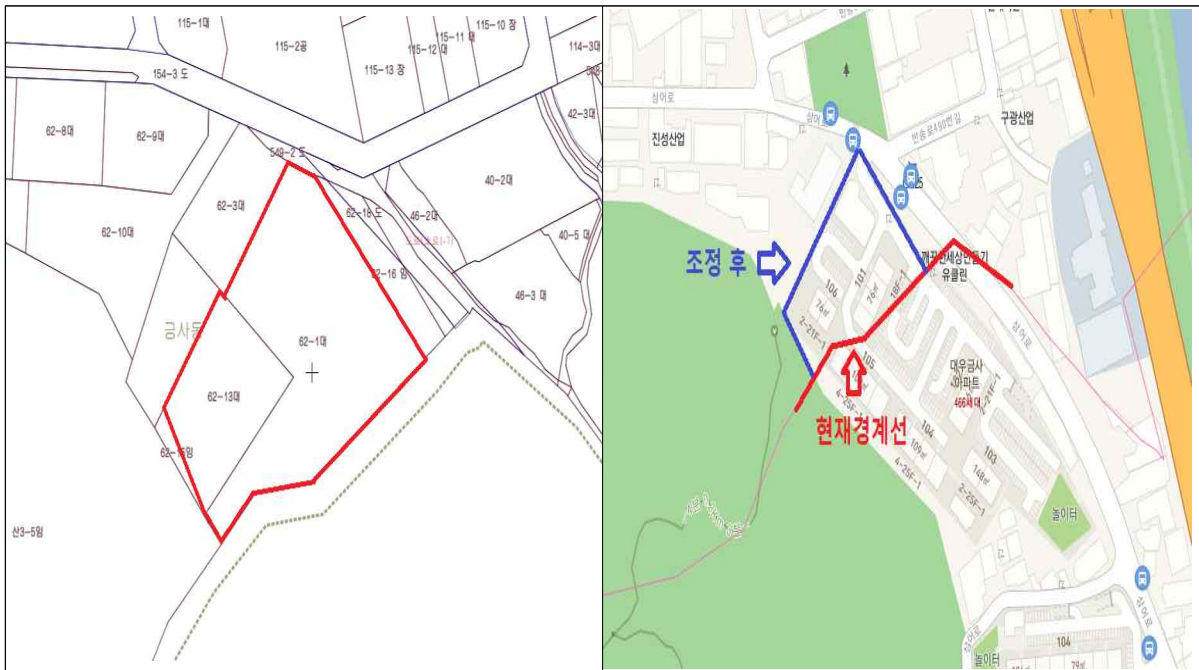
행정구역 경계조정 처리절차(지방자치법 제4조)

- ① 경계조정 기본계획 수립(구) ➡ ② 구의회 의견청취 ➡ ③ 시·도의회 의견청취 ➡
④ 시·도지사 건의(시→행정안전부) ➡ ⑤ 검토 및 대통령령안 작성(행정안전부) ➡
⑥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의 ➡ ⑦ 국무회의 상정·의결(법제처) ➡ ⑧ 대통령 재가 및 공포

③ 결과/효과

- 금사대우아파트 내 금정구 관할구역 전부 해운대구로 편입
- 행정 관할구역 일치로 주민생활 불편 및 행정 비효율성 해소

<행정구역 조정 현황도>



④ 관련규정 : 「지방자치법」 제4조

언론보도

부산일보

2020년 05월 12일
11면 (사회)

‘한 지붕 두 구청’ 대우 금사아파트 25년 만에 일원화

25년 동안 부산 해운대구와 금정구로 주소가 나뉘었던 부산 대우 금사아파트 행정구역이 해운대구로 일원화된다. 행정구역 분할로 수십 년간 불편을 겪은 아파트 주민들의 해묵은 숙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12일 대통령령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와 금정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이 공포된다'고 11일 밝혔다. 이 규정에 따르면, 해운대구와 금정구 경계에 걸친 부산 대우 금사아파트 6개 동 중 금정구 관할로 된 101·106동과 상가동 일부 필지(4400㎡ 규모)가

한 아파트에 해운대구·금정구 쓰레기 배출·택배 배송도 혼선 오늘 관할구역 변경 규정 공포 금정구 관할 101·106·상가동 내달 12일 해운대구로 변경

존 금정구 금사동에서 해운대구 반여 4동으로 변경된다. 관할구역 변경은 공포 30일 뒤인 다음 달 12일 시행된다.

모두 6개 동으로 구성된 부산 대우 금

사아파트는 1995년 8월 입주 뒤부터 4개 동(102·105동)은 해운대구, 나머지 2개 동은 금정구로 나뉘어져 있었다. 이에 따른 주민 불편이 심각했다. 동별로 재활용 쓰레기 배출일과 음식을 쓰레기 수거업체가 달라 주민 간 혼선이 빚어졌다. 특히 택배 배송 때 행정 구역이 달라 문제가 생기기도 했다는 게 주민들의 설명이다.

아파트 주민 박 모 (50) 씨는 "동별로 행정 구역이 다르다 보니 일부 주민이 다른 지역 쓰레기봉투를 사용해 마찰이 빚어지기도 했으며, 택배 물품을 받을 때도



일부 택배 기사가 아파트 동별로 행정 구역이 다른 걸 이해하지 못해 배달 착오가 생기기도 했다"며 "수십 년 이어져 온 주

민 불편이 이제라도 해소돼 정말 다행"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아파트 주민들은 입주 이후 부산시에 경계 조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하지만 지자체 간 이해관계로 인해 경계 조정 협의는 쉽사리 진행되지 못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주민 의견을 수렴한 행안부와 부산시가 중재안을 제시하면서 경계 조정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이다. 앞서 부산시는 금정구의회, 해운대구의회, 부산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행안부에 경계 조정을 건의한 바 있다.

이해정 반여4동장은 "해당 아파트 전

일 불편이 이제라도 해소돼 정말 다행"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아파트 주민들은 입주 이후 부산시에 경계 조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하지만 지자체 간 이해관계로 인해 경계 조정 협의는 쉽사리 진행되지 못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주민 의견을 수렴한 행안부와 부산시가 중재안을 제시하면서 경계 조정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이다. 앞서 부산시는 금정구의회, 해운대구의회, 부산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행안부에 경계 조정을 건의한 바 있다.

이해정 반여4동장은 "해당 아파트 전 일 신고 시에 금정구 행정 구역의 아파트 주민들이 해운대구 주민센터로 찾거나, 투표할 때 투표소 위치도 달라 많은 주민이 불편을 호소하기도 했다. 지자체별로 어르신들 복지 서비스도 달라 민원이 잇따랐다"며 "행정적인 측면에서도 예로가 많았는데, 주민 불편이 해소된 데다 행정 문제도 해결돼 다행이다"고 말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면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객석 기자 kwak@busan.com

(34.8×2.2)cm

※ 연합뉴스(2020.5.11.), 조선일보(2020.5.11.), 아시아투데이(2020.5.11.), 국제뉴스(2020.5.12.), 코리아닷컴(2020.5.12.) 등